

#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를 했겠나”... ‘대가성 입법’ 의혹 일축

##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부인 그림 강매·대작 공세에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모욕”  
與野 도덕성·자질 치열한 공방  
전술학 배치 부정적 의견 피력

국회는 전날 이어 25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의 당비대납 의혹 사건, 입법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측의 공세를 엄호하면서 정책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정태욱 의원은 “대선 전인 4월26일 (부인 김숙희 씨) 초대전을 했다”며 “조영남씨 대작 사건처럼 중견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뤄졌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철희 민주당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렇게 정치 공세하고 인격 모독하면 청문회 본래 취지랑 다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5000여만 원의 당비대납으로 구속돼 1년 2개월 실형을 산 이경호 전라남도 정부특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이 특보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틀째 질의에 출석해 답변과 답변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 돈인지 모르지만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장사를 위해 쓰고 본인이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참 의미 있는 참모를 두셨다”며 “그리고 그를 정부특보로 채용을 해주셨다. 대부라는 영화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바깥에서 보기에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다”며 “저로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인생이 사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든다.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를 했겠나”라며 “그 법은 당시 원희룡 의원과 같이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혜숙, 윤후덕, 이철희 위원 등은 이 후보자에 대해 새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방안,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전술학 배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전술학을 배치하면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남북총리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되면 총리회담을 해야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젊은 대기업 총수들이 한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며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고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차별 받아선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해 보다 포용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동성혼 합법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못한 상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선거권 연령의 18세 인하 필요성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받아쓰기·계급장·각본 없는 ‘3無 회의’ 가족 식사·비품 비용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

### 文 대통령 거침없는 개혁 행보 靑 특수활동비 53억 절감키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행보가 거침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행사 외 사비 결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 또 격의 없이 토론하는 ‘받아쓰기’ ‘계급장’ ‘결론’이 없는 ‘3無’ 수석보좌관 회의를 지향하라고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면서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의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관저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에서 추가로 검토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급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월, 목요일 두 차례씩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 앞으로 실무자를 배석시키고 대통령에 대한 이견과 소수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하라고 권장하는 등 파격적인 회의 운영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논의의 간막이를 없애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해도 좋다고 말했다.

‘받아쓰기’ ‘계급장’ ‘(사전)결론’이 없는 이른바 ‘3無’ 열린 회의를 지향하기로 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3野, 당별 찬반 기류 온도차...李 후보자 인준안 통과 될까

### 민주당 청문위원 5명 적격 입장

### 한국당 사실상 부적격 판단

### 국민의당·바른정당 찬성 우세

국회가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가운데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5명은 모두 적격 입장을 밝히고 8명의 야당 의원은 일단 판단 유보 의견을 냈지만, 야당 내에서도 당 별로 찬반 기류가 갈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삼은 ‘5대 비리’ 중 이 후보

자가 전날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으며, 아들의 병역 기피와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기류는 다르다. 영광 출신인 이 후보자를 향한 호남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인준 반대를 할 경우 호남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야당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어 고민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청문위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하되 지도부는 온건하게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지만, 결국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후보자 신상 검증에 나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24일 밤 10시께 질의에 앞서 “육실에 가까운 ‘문자 폭탄’을 2000건 받았다”면서 “무조건 다 잘했다며 용버어전가를 불러야 그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바른정당은 청문위원인 김용태 의원이 이 후보자

의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등 한국당의 강경 기류와는 구분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이 찬성하면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한국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인준안을 반대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국민적 기대감이 높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80%를 웃도는 국정 지지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반대 당론을 정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6일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되면 29일 본회의 때 인준안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31일 본회의 처리로 합의한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